

# 박용만 “기업·국민 골병들어… 경제현실 붙들어 달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여야 5당 원내대표 만나 쓴소리

“경기침체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  
장소든 규제든 조금씩 양보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예방, 이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위기 상황에 정국 경색까지 최고조에 달하자 상·공업계 수장까지 여야 설득에 나섰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7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만나 “(정치권은 경기침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유성엽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과 면담했다.

박 회장은 먼저 이 원내대표와의 자리에서 “올해 들어 (경제가) 서서히 골병이 들고 있다”며 “정치가 기업과 국민의 살림살이를 붙들여줘야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충고했다. 이어 “특히 경영이 흔들리

는 기업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여야가) 장소든, 규제든, 대화 방식이든 조금씩 양보해서 경제 현실을 붙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이어 나 원내대표와 회동에서도 “각 당이 다른 생각이지만, 국가와 국민이 없을 수 있겠느냐”면서도 “타협을 하거나 현실의 불모가 되는 것 같

고 안 하자니 극복할 현실이 많아 어려운 것 같다”며 이어지고 있는 대치 정국에 대해 고안했다.

박 회장은 이날 ‘의원난계 드리는 심의리포트’라는 제목의 재계 현안 목록을 각 당 원내대표에게 건내기도 했다.

박 회장의 정부·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대한상의 출입기자단과

의 인터뷰에선 “근본적인 개혁조치가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며 “좁은 규제 그물망은 그대로 있고, 서비스 산업 진출에도 장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규제효과에 앞장을 서야 하는데 말은 하지만, 잘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실제 국내 기업은 세계 불경기 여파는 물론 인건비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근로제도 등 정부 정책·규제까지 겹쳐 병세가 심화한 실정이다. 기업 정보 분석업체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1000대 상장사 가운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거나, 영업손실을 본 기업은 597곳에 달했다. 절반이 넘는 수치다. 하지만 이 가운데 398곳(66.7%)은 직원 평균 급여를 올렸다. 인건비·물가 등이 올랐기 때문이다.

CXO 오일선 소장은 “회사 내실이 나빠지는데도 고정비 형태의 직원 보수만 오르면 결국 인건비 부담이 커져 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기 국면에선

자칫 인력 구조조정 칼을 꺼내 들 확률이 커진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업계 우려는 통계도 방증한다.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조세 국제경쟁력 지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조세경쟁력 지수는 2016년 12위에서 2017년 15위, 지난해 17위로 낮아졌다. 최근 2년간 하락 폭이 슬로베니아 다음으로 컸다.

자료를 제시한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조세경쟁력 순위가 최근 2년간 5단계 하락해 법인세와 국제조세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임동원 환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이 조세경쟁력 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줄이고, 연구·개발(R&D) 조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임 위윈 설명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17일 국회 견학 온 어린이 단체가 분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생입법 통과 및 국회정상화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옆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가 17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생입법 통과 및 국회정상화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 옆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윤석열

진보 “적임자” 보수 “독립성 날 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하자 진보진영은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환영했지만, 보수진영은 “검찰 독립성은 날이 섰다”고 혹평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윤 지명자는 사회에 남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검사 재직 동안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수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는 게 민주당 평가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개혁적 측면에서 (윤 지명자는) 일단 적임자라고 평가한다”며 “검찰 개혁과 사회 개혁의 추진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프로필



**윤석열 (59)**  
서울  
서울대 법과대학  
서울대 법과대학 대학원  
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 23기  
대검찰청 중앙수사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자지청장  
대구·대전고검 검사  
최순실 특검법 수사팀장  
서울중앙지검장 (현)

※문무일 검찰총장 7월24일 임기(2년) 종료

다만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반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인사”라며 “(윤 지검장은) 야권 인사를 향한 감압적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 섰 오래”라고 지적했다. /석대성 기자

## 민주 “더이상 양보 없다” 국회 단독소집

### 여야 4당 “국회 개최” 목소리 추경 외 법안처리 가능할 듯 일각선 ‘동물국회’ 재연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초강수를 두면서 국회 단독 소집에 나섰다. 다만 제1야당이 없는 6월 임시국회가 어느 정도의 수확이 있을진 의문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일각에선 소집 강행으로 이른바 ‘동물국회’를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끝내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지 못했다”며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청문회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는 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 실정과 국가 부채 논쟁을 하고 싶으면 국회를 정상화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대정부질문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면 된다”고 지적하며 ‘의원 전원 국회 대기령’을 내리고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당 조직인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경우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상화 때까지 농성을 벌이겠다”고 알리기도 했다.

범진보권도 이날 민주당을 향해 국회 단독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민생이 어렵다. 경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며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 명령대로 조속히 단독국회를 소집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6월 임시회 소집 후 경제청문회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한국

당의 도박, 이제 국회가 끝나야 한다”며 “더 이상 정쟁놀음에 국민이 희생양이 될 수 없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양당이 결단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강경노선’을 재천명하면서 민주당의 사과와 경제청문회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만 국회를 열 경우 법안 처리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난망하다. 현 예결위 위원장을 황영철 한국당 의원이 맡고 있을 뿐 아니라 야권도 추경을 달가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지난 4월 여야 4당의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 안전(페스트 트랙)’ 강행 당시 보였던 난투극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석대성 기자

## 뿌리산업 추진 10개월… 1770명 고용창출

산업부, 뿌리산업 조성현황 점검

지난해 5월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을 추진한 이후 지난 3월까지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177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자리위원회와 17일 충남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영광YKMC에서 개최한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 현장 간담회에서 지난해 5월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뿌리산업은 금속가공기술을 활용하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6개 업종을 지칭한다.

산업부는 기업 성장 지원,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 연령대별 일자리 교육 등을 통해 뿌리산업 일자리 늘리기를 지원해왔다. /석대성 기자

## 해수부, 항법위반 과태료 300만→1000만원 확대

오는 6월부터 선박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고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이 안전과 관련한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

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천만원으로 오른다. 현재는 최고 30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기초항법 외에도 좁은 수로나 통항 분리수역에서 항법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1회 위반 시 과태료 9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석대성 기자

## 농식품부, 축산업 허가·등록자 일제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12만 5천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 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

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 기준 준수, 위생·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 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산란계 및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 등을 강화한 축산업 허가 요건·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석대성 기자